

# <해외출장결과보고서>

## 1. 출장자:

-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 2. 출장일시:

- 2014년 2월 23일 ~ 3월 1일(5박 7일)

## 3. 출장지:

- 독일 베를린, 할레

## 4. 출장목적:

- 독일의 통일 이후 정치경제사회통합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서독의 분야별 통합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조사

## 5.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 수행 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2.23(일)	인천	독일 베를린	o 인천공항 출발→모스크바경유→베를린 도착		
2.24(월)	베를린	베를린자유대 학교		<p><u>오전 10시</u> 1차 간담회 주제: 동서독의 정치통합과 정책 과제</p> <p><u>오후 2시</u> 베를린첨단과학단지(이들러스 호프)시찰</p>	이은정 교수
2.25(화)	베를린	프리드리히-에 버트 재단(Friedrich -Ebert-Stiftu ng)		<p><u>오전 10시</u> 베를린 의회청사 및 정부청사구역 방문</p> <p><u>오후 3시</u> 2차 간담회 주제: 동서독통합의 문제와 극복과정 그리고 시사점</p>	Mrs. Franziska Richter
2.26(수)	할레	할레경제연구소(Institut für Wirtschaftsfors chung Halle)		<p><u>오전 10시</u> 베를린출발-할레 도착</p> <p><u>오후 2시</u> 3차 간담회 주제: 통일 이후 구 동독 작센지역의 경제발전과 과제</p>	Dr. Gerhard Heimpold
2.27(목)	베를린	동서포럼(Ost- west-forum Büro Berlin)		<p><u>오전 10시</u> 구 동베를린 집단주거지 방문</p> <p><u>오후 2시</u> 4차 간담회 주제: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과정과 정책과제</p>	Mr. Axel Schmidt-Goedelitz
2.28(금) 3.1(토)	베를린	모스크바경유 인천공항 도착	o 베를린 출발 →모스크바경유→인천공항 도착		

## 6. 현지 간담회 주요 내용

### 1)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의 1차 간담회

- 일시: 2014. 2. 24. 10:00 ~ 12:30
- 장소: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 발표자: 이은정 교수(베를린자유대학교) - 통일독일사례 연구동향
- 참석자:
  - 독일측:
    - 이은정 교수(랴오둥대학교)
    - Dr. Holmer Brochlos(랴오둥대학교)
    - Mr. Eric J. Ballbach(랴오둥대학교)
  - 한국측:
    -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영은 통일연구원 연구원
- 동서독 통합의 중요한 전제: 쌍방간의 호혜적 교류에 기초
  - 동서독 통합과정을 검토함에 있어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은 통일 전 동서독 간 교류는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닌 쌍방 간에 호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임.
  - 서독이 동독을 '인도적 지원' 했다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함.
  - 동독은 사회주의권 내에서는 선두주자였고, 모든 면에서 체제가 갖춰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은 구 동독인들에게 일종의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음.
  - 동독 전 동서독 간 교류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주고 받기' 또는 '거래'에 해당함.
- 행정통합 분야: 공무원순환보직제 검토 필요

- 공무원 입기와 정책 적용문제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다수 존재. 특히, 성(省)마다 공무원 입기 다른 중국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임.
- 동서독의 행정분야 통합은 서독의 행정시스템을 동독에 그대로 적용한 경우로서 동독의 개혁이 시작된 89년 12월 이후 동독에 파견된 서독 공무원 수는 3만 명을 초과, 이들은 동독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전환기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공무원 이동은 단기 연수를 목적으로 한 최장 6개월의 체류에 불과

- 따라서 한국의 공무원 순환보직기간은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서 최장 3년에 불과한 현행 한국의 순환보직 시스템의 재검토가 요구됨.

○ 통일기획요원의 지속적 관리 및 활용 필요

- 통독 당시 동독으로의 파견 공무원 선발방식은 각 주별 자원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들 지원자 대부분은 동독지역에 가족, 고향 등의 연고가 있는 경우였음.
- 따라서 한국의 경우 통일기획요원으로의 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현재까지 통일기획요원이 많이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연수 이후 지속적 관리도 중요하므로 1년에 한 번씩 모여 피드백 기회 가질 필요 있음.

○ 통독 전 동서독 간 비공식 교류 현황

- 비공식 차원의 많은 교류 있었음.
  - 자동차, 전화, 인쇄기기 등 동독에 다수 제공
- 특히, 교회는 비공식적 창구 역할을 하며 동독 교회의 목사 급여를 서독 교회가 담당함.
- 건설 기자재 등의 경우 교통협정을 체결,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함.

○ 기술통합을 위한 표준화 사례

- 당시 동독은 유럽공동체 시장에 통합되어 있었으므로 기술 수준의 통합 논의는 국제규격에 따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 될 수 있었음.
  - 동독의 생산 단가는 낮았으나 기술 수준은 높아 전문 숙련공 자격이 서독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서독과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바로 재취업이 가능했음.
    - ※동독의 기술력이 높은 배경에는 서독과 동일한 수준의 기초교육을 했다는 데 있고(심지어 수학실력은 동독이 더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서독과 동일한 기초과학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통독 이후 서독의 자본주의적 시스템 아래에서 동독의 기술력은 큰 장점으로 활용됨.
- 통독 후 정책수립과정에서의 동독 출신 공무원 참여도
- 포츠담 주와 브란덴 주정부의 경우 하급직 공무원의 64%, 사무관 이상 83%의 공무원이 교체됨.
  - 연방정부의 경우 동독 출신 공무원의 대다수가 방출됨.
  - 따라서 정책수립과정에서 동독 출신의 참여율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음.
- 인프라 구축사례
- 교통, 통신, 도로건설 등 동독지역 인프라 구축은 국가에서 전담하여 추진함.
  - 가장 빠른 시기에 동서독이 동일한 수준을 갖추게 된 부분이 바로 인프라임.
- 통독 이후 대학 교수요원 사례
-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동독 출신 자연과학 분야 연구원들의 경우 통독 이후 정계 진출 비율이 40%를 초과함.
    - ※서독의 경우 정계 인물 가운데 법학, 경영학 전공자가 70% 이상을 차지
  - 반면, 막스-레닌주의를 비롯한 사회과학, 철학분야 교수요원의 경우 전원 해고됨.
  - 해고된 교수요원이나 슈타지 요원을 비롯한 동독의 엘리트들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 당시의 역동적 경제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였으나 이미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93~94년도부터 해고되어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음.

○ 통합비용

- 지역개발비용과 통일비용은 구분할 필요 있음.
- 현재 한국 내에서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북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임.

○ 동독의 비교우위 시스템

- 농업 협동조합, 교육시스템, 의료시스템(폴리클리닉) 등이 있음.
- 농업 협동조합: 동독에는 미국의 광활한 농장 규모에 비견할만한 대규모 협동농장 발달, 통독 이후 동독 주민을 우선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여 특혜 부여함.  
※20년이 지난 지금 서독의 대기업들이 동독지역의 대규모 농토를 매수, 독점화 문제 나타나기 시작
- 교육시스템: 대학에도 탁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단기간에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 운용.
- 의료시스템: 동독의 폴리클리닉 시스템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전문화와 특화를 지향하는 종합병원 형태를 갖추어 양질의 시스템으로 평가되나 통독 이후 폐지됨.

※현재 부활 추진 중

○ 경제통합: 지역별 전통의 계승 중요

- 동독 내 각 지역별 기업화 전통들 다시 부활하고 있음.
- 드레스덴, 작센-자동차 산업, 할레-화학공단, 예나-광학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집중 투자로 현지 기업 집중 육성이 필요함.

○ 기타: 동서독 국민간 소득/재산 수준

- 통독 후 소득의 평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재산의 평준화는 안 되고 있음.
- 서독인의 자산 보유규모는 40만 유로이나 동독인들의 경우 10만 유로에도 미치지 못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북한 통합에 관한 조언

-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통일 논의는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임.
- 독일의 경우 특별한 통일 논의가 없었음에도 통일을 민족적 과제이자 유럽통합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음.
- 한국은 민족적 과제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한편, 미시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2)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서의 2차 간담회

- 일시: 2014. 2. 25. 15:00 ~ 17:30
- 장소: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회의실
- 발표자: Franziska Richter(Friedrich-Ebert-Stiftung) - 통일독일의 정치사회 통합과정
- 참석자:
  - 독일측:
    - Franziska Richter

○ 한국측:

-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영은 통일연구원 연구원

○ 동서독 통합과정에 관한 개괄적 브리핑

1) 서독의 대동독 통일정책

- 통일문제는 2차적으로 생각, 양쪽의 국가체제를 공존시키는 방향에서 열린 통일정책을 실시
- 당시 서독은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내부적 요소와 동독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갑작스런 통일을 맞이하게 된 것
- 본격적인 통합정책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적극적으로 통일협정을 맺고, 화폐통합을 이루는 등 실제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작
-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현명했던 점은 동서독 양자만이 통일을 추진한 것이 아닌 주변국과의 포괄적 협상을 통해, 유럽 단일 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의 통일을 추진했다는 것

2)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

- 1945년 동서독 분단
- 1950~60년대: 고립과 대립의 정책
  - 1955년, 동서독 각각 바르샤바와 나토기구 가입, 냉전 시작
  - 아데나워 정부는 동독 정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며 동독과 외교관계를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소위 할슈타인 원칙을 채택
  -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이 동서독 간 대립의 최절정에 해당
- 1960~70년대: 동서독 관계 개선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

- 1963년 12월, 동독과 베를린 통과사증협정 체결
  - 1966년 불경기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자민당이 연정에서 탈퇴함으로써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 구성, 동서독 접촉 강화를 통한 동독 주민의 생활 증진 추구
  - 1970년대: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
    - 1972년 12월, 브란트-호네커 동서독 기본 조약 체결
      - ※기본조약은 유럽 모든 국가들의 국경선 불가침과 영토 보전,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 본문과 양독간의 관계 설정 및 상호간의 자주 독립 존중이 포함되어 구성
    - 1973년 9월, 서독 통신사 특파원이 동베를린에 상주, 파견 시작
    - 1973년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
  - 1980년대: 동서독 교류협력 확대
    - 1983년, 서독의 10억 마르크 차관 제공 보증
    - 1987년 9월, 동독의 호네커 당 서기장 서독 공식 방문
    - 양독 국경에서의 여행, 방문과 소포 우송 문제 완화 조치 발표
- 통일 후 각종 정치, 행정에의 동독 주민 참여도 및 습득 정도
- 서독의 정치참여 문화를 습득한다기보다는 친근해지는 것이 관건
  - 동독 체제에서는 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했으므로 동독인들은 통일 후 당에 소속되는 것을 기피, 현재까지도 동독지역에서는 사민당원 모집에 어려움 겪고 있음
  - 통일 과정에서의 가장 큰 착오는 동독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위로 부터의 엘리트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
- 1990년대 초 동독인들의 탈동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 조속한 1:1 화폐 통합 조치, 이는 동독마르크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정치적인 결정
    -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서독 간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곧바로 서독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꿈을 심어준 것 자체가 문제
  - 작년에 처음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 숫자 줄고, 동독으로의 재진입 수 증가

※ 특히 30대 초 고학력 남성인력의 동독으로의 재진입 수 증가 (원인은 여전히 낮은 동독의 월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기 때문)

○ 동서독간 의료기술(제도)의 차이

- 질적인 차이는 크게 없었음.
- 동독의 탁아소와 폴리클리닉시스템은 긍정적 유산에 해당

○ 독일통일의 성과

- 통일과 함께 구동독 지역의 정치, 경제, 사법, 행정, 경찰, 교육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서독의 제도를 도입
- 40년 동안 지배했던 공산주의 제도가 민주제도, 사회시장경제제도로 변화
- 서독의 막대한 경제지원으로 구 동독지역이 변화되었고 개개인의 경제수준도 과거 동독시절에 비해 현저히 높아짐
- 모든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망과 통신망이 현대식으로 구축되었고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는 해소
- 40년 동안 전혀 다른 제도와 가치관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적 통합은 시간이 필요

○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 남북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준비 필요
- 특히, 젊은 세대와 차세대간 교류가 중요
- 통일비용만 생각하기 보다는 한 국가가 되었을 때의 통일편익도 고려 필요



### 3) 할레경제연구소에서의 3차 간담회

□ 일시: 2014. 2. 26. 14:00 ~ 16:30

□ 장소: 할레경제연구소 회의실

□ 발표자: Dr. Gerhard Heimpold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 통일독일의 경제통합과 작센지역의 경제발전

□ 참석자:

○ 독일측:

• Dr. Gerhard Heimpold

○ 한국측:

•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영은 통일연구원 연구원

□ 주요 논의 내용:

○ 통일 당시 구 동독의 기업과 인프라분야는 매우 낙후되어 있었음

- 제보업분야는 과잉고용상태였고, 서비스분야는 과소개발 상태였음.

- 당시 제조업에서는 '콤비나트'와 같은 대규모 기업중심이었고 중소기업은 미약하였음.

-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생산성은 초기에 서독의 50%미만 수준에서 2012년에는 80%수준까지 성장하였음
  - 산업 업종 가운데 제조업생산부문은 서독의 생산성을 1999년 이후 초과하였지만, 농수산업, 서비스부문은 여전히 8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통일 이후 인적 자원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수가 구 서독에 비해 구 동은 크게 적은 수준임
  - 2012년 기준으로 구 서독이 900만명 수준인데 비해 구 동독은 250만명 수준임.
  
- 구 동독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수는 구 서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500대 상위기업의 경우 구 서독에 469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고 31개 기업만이 구 동독에 본사를 두고 있음.
  - 구 동독은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보다 높은데, 구 서독은 이와 반대임(2011년 기준).
  - 이러한 결과는 구 동독의 기업입지 경쟁력이 여전히 낮음을 의미.
  
- 구 동독의 향후 경제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 기업의 구조 개선 및 연구개발/혁신 증진.
  - 산업클러스터 형성 지원.
  - 경제발전 거점으로서 도시의 기능 강화.
  - 숙련노동인력의 확보.

#### 4) 동서포럼에서의 4차 간담회

□ 일시: 2014. 2. 27. 14:00 ~ 16:00

□ 장소: 동서포럼 베를린 사무실

□ 발표자: Mr. Axel Schmidt-Goedelitz - 통일독일의 사회문화통합과 동서포럼의 경험

□ 참석자:

○ 독일측:

- Mr. Axel Schmidt-Goedelitz

○ 한국측:

-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영은 통일연구원 연구원

○ 동서포럼(Ost-west-forum)의 '삶의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및 재원

- 운영 방법

- 주로 2박 3일의 주말을 이용, 동서독인 각 5명씩 성별, 직업, 연령, 정치적 성향 등이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 또는 추천에 의해 선발
- 각자의 인생 경험을 이야기
- 이야기를 진행할 사회자(동서독 출신 각 1명, 총 2명) 필요

- 운영 재원

- 동서포럼 회원 500명의 회비와 법정지원금(법원으로부터 징수된 벌금 중 일부를 사회공공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운영

※회비: 월 € 5

※프로그램 참가비: € 200

-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정 단체 또는 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대부분 자원봉사로 진행

- 운영상의 주의사항

- 참여한 사람의 개인사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 필요 (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내용은 말할 수 있음)
- 초창기에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기록해 두었으나, 동독 출신 사람들이 이를 싫어하여 폐지 (단,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가능)

※당시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책으로 출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현재 38개의 생애 이야기를 담은 책 출간 예정

- 사회자는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전체 진행되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위와 관용의 덕목이 요구되고 심리학적 스킬도 필요
- 공식적 장소보다는 비공식적 장소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데 도움
- 중요한 것은 어느 일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이 동일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 프로그램 종료 후 피드백

- 초창기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남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만남의 장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 배경

- 1990년대 초부터 구동독 주민의 70%가 이류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동서독 간에는 여전히 격차 존재

- 동서독 간 임금수준의 격차는 75%
- 고위급 인사 가운데 동독 출신은 5%에 불과

※현재 18명의 장관 중 동독 출신은 1명에 불과하며, 메르켈 수상과 독일연방 대통령을 제외하곤 동독 출신은 전무한 실정. 독일연방최고헌법 판사 18명은 모두 서독 출신이고, 하위 기관인 연방재판소에는 유일하게 1명만 동독출신 판사

- 인문사회과학 교수의 95%가 서독 출신 (동독 지역 대학에서도 대부분 서독 출신 교수 재임)
- 동독 투자자본의 95%가 서독에 의한 것

- 이러한 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에는 동서독인들 간에 서로에 대한 몰이해로 융화되지 않고 서독인들은 서독인들끼리, 동독인들은 동독인들끼리 유유상종하기 때문.
-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프로그램은 빠른 속도로 서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  
 ※대화 시 주의사항: 타인의 이야기를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여야 함

○ 프로그램의 효과

- 독일은 직급, 계층간 평행선을 이루는 평행사회라고도 불릴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질 기회 많지 않은 상황.
- 본 프로그램은 전 독일의 20개가 넘는 지역에서 운영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합에 크게 기여.
- 통독 직후부터 바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통일문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7. 현지 시찰 주요 내용

1) 아들러스 호프 과학단지 시찰

- 이 과학단지는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서 진행된 과학기술분야 개발의 성공사례로서 베를린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 과학단지 개요

○ 500여개의 첨단기술기업과 광학, 마이크로시스템, 정보기술(IT) 및 미디어, 생물공학, 환경, 신재생 에너지분야의 10개 주요 연구기관, 훔볼트대학교 자연과학부 등이 입주한 복합과학기술단지임

○ 면적은 4.67km<sup>2</sup>, 종사자 약 1만 5000명, 입주기업 954개, 과학기술분야기관 16개

○ 이 과학단지는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단지, 미디어슈타트, 기업 및 서비스부문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학기술단지

- 기업: 계획 445개(종사자: 5,286명, 현재 입주기업 48개, 매출액: 6억 6,760만 유로)

- 과학기술관련 기구

- 대학외 연구기관(기관수: 10개, 종사자: 1,760명, 예산(2012): 자체조달 1억 2,420만 유로, 지원금 5,260만 유로)

- 훔볼트 대학교(연구기관수: 6개(정보, 수학, 화학, 물리, 지리, 심리), 종사자: 1,056명, 학생수: 8,438명, 예산: 자체조달 4,300만 유로, 외부조달 2,600만유로)

○ 미디어슈타트

- 기업: 146개(종사자: 1,763명, 매출액: 1억 8,110만 유로)

○ 기업 및 서비스부문

- 기업 및 시설: 계획 363개(종사자: 4,969명, 현재 입주기업 68개, 매출액 및 예산: 5억 8,330만 유로)

□ 개발과정

○ 아틀러스 호프 과학단지의 부지는 20세기 초반 비행기술 실습장과 1차세계대전의 군수병참기지 역할을 하였음

- 1930년대 나찌 시기에는 항공기술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2차세계대전 시기에는 무기의 실험장으로 활용되었음
- 동독시기에는 구 소련과의 우주과학기술 협력센터 등 연구기능이 발달하였고 베를린장벽 붕괴(1989)당시에도 5,600명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였음
- 통일 이후 아들러스 호프는 베를린의 새로운 과학기술단지로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독일내 최대의 과학기술단지가 되었음

### <과학기술단지 전경>



### 2) 구 동베를린 주거단지 시찰

- 구 동베를린지역의 주거단지들은 통일 이후 전면적인 개보수사업을 통해 현대화 되었음
- 이번 출장에서는 구 동베를린의 판코(Pankow)지역을 답사하였음
- 판코(Pankow)지역은 과거 동베를린에서도 낙후된 주거지역이었으나 통일 이후 주거지 현대화를 통해 현재에는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은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시설도 구 사회주의 시절의 시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도 함

<현대화된 주택과 방치된 주택>



< 현대적으로 정비된 주거단지 >



< 구 동독시기의 교육시설로서 현대화되지 못하고 방치된 초등학교 시설 >

